

KERI Zoom-In

Free Market

Free Enterprise



Free Competition

일본 민주당 정권의 구조개혁 추진 및 시사점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kahn@keri.org

일 본에서 54년 만에 정당 간 정권교체를 이룬 지 두 달여가 지났다. 새로 집권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은 관료주의를 청산하여 정부부문의 효율을 높이고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보다 분배를 통해 내수를 부양하려 하며 동북아공동체 창설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탈관료 내각' 방침은 국회의원이 행정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영국식 내각제 운영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 총리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 확립함으로써 일본경제 회생을 위한 구조개혁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내수시장 활성화정책과 동북아공동체 추진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산업구조 합리화를 추진해야 하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내수시장의 외연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는 민주당의 대국민 직접지원 정책이 일본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경계가 적지 않다. 이는 소득 재분배정책은 경제의 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 동력 확충도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I. 일본 민주당 집권의 배경

1. 총선 결과 및 정권 출범

□ 8월 30일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총 480개의 의석 중 308석을 차지, 과반수를 웃도는 의석을 획득해 압승

- 54년간의 자민당 장기집권이 끝나고 여야 양대 정당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 1993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비자민(非自民) 연립 야당이 약 10개월 간(1993. 8~1994. 6) 정권을 내주었으나 당시에는 중의원 제1 다수당 지위를 유지

표 1. 일본 중의원 총선거 결과

구분	민주	자민	공명	공산	사민	국민신당	기타	합계
총계	308	119	21	9	7	3	13	480
선거구	221	64	0	0	3	3	9	300
비례	87	55	21	9	4	0	4	180
선거전	115	300	31	9	7	4	14	480

- 민주당은 정권 인수에 착수, 9월 15일 하토야마 정권이 출범
 -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특별 국회 총리지명 선거에서 중의원 480명 중 327표를 얻어 제93대 일본 총리에 선출
 - 하토야마 내각은 민주당 정권 창출에 기여한 당내 중진 인사들이 대거 중용된 가운데 연립 정권 파트너인 사민·국민신당 대표 입각, 40대 참신한 장관 발탁(2명) 등이 조화를 이루며 ‘올스타 내각’이라는 평가
 - ‘탈각료 정치’ 공약에 따라 현직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배제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한 부처에는 민주당 실력자들을 대거 기용해 힘을 실어줌.
 - 신설한 부총리 겸 국가전략국장관에 간 나오토 대표 대행, 외무장관에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 관방장관에 히라노 히로후미 대표 비서실장, 재무장관에 후지이 히로히사 최고고문, 문부과학장관에 가와바타 다쓰오 전 간사장, 금융·우정장관에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 국토교통장관에 마에하라 세이지 전 대표 등이 각각 기용됨.

- 막후의 최고 실력자로 떠오른 오자와 이치로 대표 대행이 당 간사장을 맡아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 대비

표 2. 하토야마 내각 주요 각료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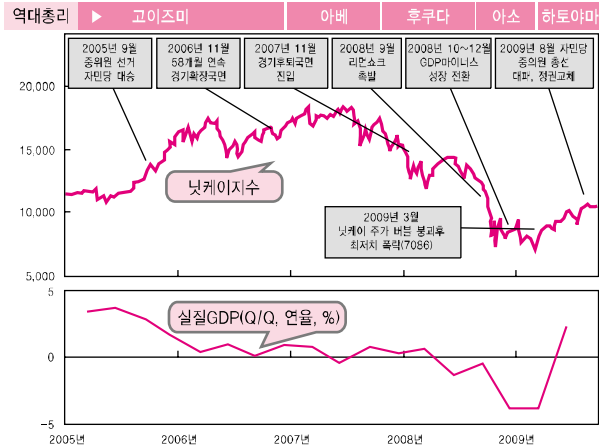
직 위	이름(나이)	주요 경력
총리대신	하토야마 유키오(62)	민주당 대표
부총리(국가전략상)	간 나오토(62)	민주당 대표 대행
외무상	오카다 가쓰야(56)	민주당 간사장
재무상	후지이 히로히사(77)	민주당 최고고문
관방장관	히라노 히로후미(60)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금융·우정상	가메이 시즈카(72)	국민신당 대표
경제산업상	나오시마 마사유키(63)	민주당 정조회장
방위상	기타자와 도시미(71)	참의원 의원(3선)
국토교통상	마에하라 세이지(47)	민주당 대표
문부과학상	가와바타 다쓰오(64)	민주당 부대표
법무상	지바 게이코(61)	참의원 의원(4선)
농림수산상	아카마쓰 히로다카(60)	중의원 의원(7선)
소비자·저출산상	후쿠시마 미즈호(53)	사민당 당수
환경상	오자와 사키히토(55)	중의원 의원(6선)
후생노동상	나가쓰마 아키라(49)	정조회장 대리
총무상	하라구치 가즈히로(50)	중의원 의원(5선)
국가공안상	나카이 히로시(67)	법무상
행정쇄신상	센고쿠 요시토(62)	중의원 의원(6선)

2. 민주당 승리의 배경

- 민주당의 승리는 낡은 정치문화, 경제침체 및 빈부 격차 등을 초래한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문책과 개혁 요구에 힘입은 야당 바람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자민당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
 - 2005년 9월 총선에서 승리 이후 1년에 한 번 씩 내부 파벌 싸움으로 총리를 바꾸면서 밀실 담합에 의한 구시대 정치가 지속됨.
 - 기존 303명의 자민당 의원 중 무려 108명이 지역구를 윗대로부터 물려받았을 정도로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외면
 - 고도성장기에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던 정관 유착은 정치 부패와 예산 낭비의 근원이라는 비판이 고조

- 잇따른 정치 부패사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료 등에 대한 비판이 자민당 책임론으로 연결됨.

그림 1. 최근 5년간 일본 총리와 주요 정치·경제사건



□ 일본 경제의 침체와 자민당의 통치력 약화

- 199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 재정적자 확대, 고이즈미 정부의 개혁 등으로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약화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자민당의 정책대응에 대한 불만과 자민당 고이즈미 총리(2001. 4~2006. 9)가 내건 우정민영화 등의 개혁 이후 양극화 심화가 서민의 상실감을 키움.
 - 일본의 지니계수는 1994년 0.297에서 2004년 0.308로 확대
 - 고이즈미 총리의 우정민영화, 지방교부금 삭감, 공공건설 축소 등 개혁 정책으로 우정관료, 이해관계층 등 기득권층의 지지 이탈을 초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하락과 수출 급감으로 인하여 일본 경제가 선진국 중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자민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이 증폭
 -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는 반면 세계 1위 자동차업체인 도요타의 영업적자가 확대되고, 소니·파나소닉 등 전자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등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

□ 개혁 및 세대교체 요구를 흡수할 대안 정당의 등장

표 3. 일본 경제지표 추이

구분	1970~1979	1980~1990	1991~2000	2001~2007
GDP 성장률*	4.7***	3.9	1.3	1.6
소비자물가 상승률	9.0	2.6	0.8	-0.3
실업률	1.7	2.5	3.3	4.7
고용률	66.9	67.2	69.3	68.9****
경상수지**	0.7	2.0	2.5	3.4
재정수지**	-1.7	-1.6	-4.4	-5.6
구분	2007	2008	2009	2010
GDP 성장률*	2.4	-0.6	-6.2	0.5
소비자물가 상승률	0.1	1.4	-	-
실업률	3.9	4.0	5.2	5.7
고용률	70.7	70.7	-	-
경상수지**	4.9	3.2	1.4	1.9
재정수지**	-2.5	-2.7	-7.8	-8.7

주: 1) *는 2009~2010년은 IMF 전망치
 2) **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율
 3) ***는 1971~1979년 자료
 4) ****는 2001~2006년 자료
 자료: 일본 통계청, OECD, 세계은행, IMF

- '55년 체제'하에서 자민당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도 유권자들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회당에 정권을 맡기지 않았으나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자민당 지지기반에 균열이 발생함.
- 1993년 비자민 연립정권이 탄생한 이후 신진당이나 현재의 민주당과 같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비자민당 그룹이 현실적인 대안 정당으로 등장
- 자민당에 대한 실망이 2007년 국민연금 기록 누락사건으로 폭발한 국민의 분노와 맞물리면서 개혁 및 세대교체 요구로 이어지면서 야당 바람이 거세게 일어남.
- 2007년 국민연금 기록 누락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에 대해 불안이 비정규직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을 배경으로 일거에 노출됨으로써 정권 교체 욕구와 야당 바람이 거세게 일어남.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일본 경제 회복세와 고이즈미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¹⁾

○ 버블 붕괴 후 장기침체를 겪어 오던 일본 경제는 2002년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 이전까지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

- 회복 초기에는 중국 특수에 힘입은 수출위주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4년을 전후로 소비 투자 등 내수중심으로 성장세가 높아지고 고용 및 임금 증가로 체감경기도 회복

○ 위기 이전 일본 경제회복의 배경은 기업·노동·금융 공공부문의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이 강화된 데 있음.

- 1990년대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R&D투자 확대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술경쟁력이 강화
-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완화*, 실업수당 확대 및 연금제도 개선 등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크게 완화
 - * 항만운송, 건설 등 5개 핵심 업무 외에는 파견근로 원칙 자유화(1999), 파견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의 연간 수입 및 노동일수 제한 폐지(2003), 파견가능기간 1년에서 3년(26개 전문 직종은 무기한)으로 연장(2004) 등
- 1998년 이후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부실채권 정리와 부실 금융기관 퇴출 및 합병 등으로 금융산업 재건과 금융 중개기능 회복
- 정부 조직의 축소, 민영화, 규제완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추진, 민간 활력을 제고
 - 2001년 중앙정부 조직을 1부(部) 22성청(省廳)에서 1부(部) 12성(省)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통폐합하여 약 40% 축소
 - 136개 공기업을 폐지, 민영화 등으로 정리하고 우정사업 민영화도 추진
 - 공항·항만 등 정부시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지정관리자제도(2003) 외에 구직 알선, 연금보험료 징수 등 공공서비스 제공자를 관공서와 민간사업자 간의 경쟁입찰에 의해 결정하도록 개방

- 구조개혁이 최우선과제라는 방침하에 정부 지출 확대에 의한 인위적 경기부양을 최대한 억제

- 1992~2000년 중 9차례에 걸쳐 123조 엔이 넘는 경기부양책을 반복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정부 부채만 증대시켰으며 '개혁 없이는 진정한 경제회복이 어렵다'는 인식에 기인

- 가계의 소비성향 상승과 고령층의 소비 확대로 내수 기반 확충

- 일본의 가계저축률이 2000년 이후 급락하여 1990년대 후반 12%대에서 2004년 3%선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가계의 소비성향 상승을 의미
- 소비성향 상승은 인구의 고령화 진전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진데다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더욱 상승하는 추세에서 비롯함.

○ 고이즈미 개혁에 대한 비판

- 고이즈미 개혁의 핵심인 '작은 정부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 규모는 오히려 확대

-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출범 이후 정부 예산은 30%(11.5%), 중앙공무원 수는 11만 명(13.1%)이 각각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234조 엔(43.3%) 확대²⁾

- 고이즈미 정권이 4년반 동안 공약한 개혁과제 중 실행된 것은 20~40%에 불과하며 그나마 아베정권 이후 개혁이 정체되거나 후퇴

- 고이즈미 총리는 공무원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개혁추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실행의 상당부분을 관료에 맡김으로써 관료들의 저항을 제어하는데 역부족
- 후임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노선을 계승한다고 했으나 아무것도 개혁하지 않았고, 후쿠다 총리는 보수성향의 인사를 대거 기용, 개혁 노선이 후퇴하였음.

-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책이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그 후유증으로 소득격차 확대

-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 규제완화 등에 따른 청년 실업 및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로 저소득층이 확대

1) 고용수·김진홍(2006) pp.14-43 참조

2) 한국은행(2005) pp.6-7 참조

II. 민주당 정권의 주요 정책 변화

1. 민주당의 정책 기초

- 민주당의 정권 공약(매니페스토)은 '생활을 위한 정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하토야마 정권의 구상으로 5원칙과 5개 대책을 제시

표 4. 민주당의 정권 구상 5원칙과 5개 대책

5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료중심의 정치로부터 집권당이 책임을 지는 정치가 주도의 정치 ② 정부와 여당의 이원체제로부터 내각 아래에 정책결정을 일원화 ③ 각 성청의 할거주의에 의한 성의 이익으로부터 수상중심의 국익으로 ④ 종적인 이권사회로부터 횡적인 유대형 사회로 ⑤ 중앙집권으로부터 지역주권으로의 전환
5개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부의 대신, 부대신, 정무관(이상 정무 삼역), 대신보좌관 등의 자리에 국회의원 약 100명을 배치하고, 정무 삼역을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여 정책을 입안, 조정, 결정하도록 함. ② 각 대신은 성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내각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함. '각료위원회'를 통하여 각 성청 간 조정이 필요한 문제를 사전조율함. 사무차관회의는 폐지하고, 의사결정은 정치가가 행하도록 함. ③ 총리관저 기능을 강화하고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국을 설치하여 관민의 우수한 인재를 결집하고 정치 주도를 통해 신시대의 국가비전을 창출하기 위한 예산의 틀을 편성함. ④ 사무차관·국장 등의 간부 인사는 정치 주도하에서 업적 평가에 입각한 새로운 간부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정부 간부 직원의 행동규범을 설정함. ⑤ 낙하산 인사에 의한 알선을 전면적으로 금지함.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행정쇄신회의를 설치하고, 모든 예산이나 제도의 자세한 조사를 행하여 불요 불급한 예산이나 부정을 배제함. 관·민,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을 재점검하고 정리를 행함. 국가행정조직법을 개정하고, 성청(省廳) 편성을 기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자료: 미즈호종합연구소

□ 민주당의 정책 기초

- 민주당은 중산층 도시 근로자를 정치적 기반으로 한 중도개혁당이나 자유당과의 통합으로 농촌 및 비도시 지역에도 정치적 기반을 보유
 - 개혁 중시의 기본 틀은 유지되나 당내 진보 및 보수 정치인들이 공존하여 절충을 위한 중도 보수적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
- 정치·외교·안보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개혁적 조치들이 대거 등장

- 예산 낭비를 줄여 재정을 건전화하는 한편 사회 보장제도를 개혁하고,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 민주당은 매니페스토(manifesto)의 형식요건뿐만 아니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 유권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표 5. 민주당의 정권 실행계획표

(단위: 조 엔)

정책 추진항목	정책 경비 소요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아동수당: 월 2만6천 엔 출산장려금: 일시금	아동수당 전반 실시 2.7	5.5	5.5	5.5
공립학교 무상교육 실시 - 사립고생에게도 상당액 조성	전면적으로 실시 0.5	0.5	0.5	0.5
연금제도 개혁 - 연금기록 문제 대응 - 신연금제도 창설	기록문제 집중 대응기간 0.2		제도 설계	신제도 입안
의료·개호 재생 - 의사부족 해소 - 신종플루 대책 - 개호노동자 처우개선	의사부족 등 단계적 해결 2011년 1.2		1.6	1.6
농업 호별 소득 보상 - 판매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 보상	조사·모델사업/ 제도설계	1	1	1
잠정세율 폐지·감세	2.5	2.5	2.5	2.5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 원칙적으로 무료화	단계적 실시 2011년 1.1		1.3	1.3
고용대책 - 고용보험 적용: 비정규노동 자로 확대 - 구직자 지원책	0.3	0.8	0.8	0.8
소요액	7.1	12.6	13.2	13.2
기타 정책 -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폐지 - 대학 장려금 확충 - 최저임금 인상	재원 확보하면서 순차적으로 실시		-	3.6

자료: 민주당 매니페스토

2. 국내 정치

-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 탈관료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관료주도에서 정치인 주도로의 정치시스템 전환
- 정관 유착을 혁파하기 위한 정치 및 행정 개혁
 - 민주당은 매니페스토에서 정책결정을 관료 주도에서 총리 주도로 바꾸겠다고 공약

- 국회의원이 행정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영국식 내각제 운영방식을 도입
 - 정치 및 정책 불신이 관료들의 정책 예산 인사 전횡과 부처 이기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시각
- 여당의원을 중앙정부 고위관료로 기용
- 17개 성청의 각료, 부대신 외에 의원들을 부대신·정무관·장관보좌관으로 파견해 각 4명으로 이뤄진 ‘대신팀’을 규정
 - 모든 주요 정책은 대신팀이 결정하고 관료들은 보좌 역할
 - 기존의 ‘족의원’과 관료 사이에 밀실에서 이루어진 이해조정이 사라지고 기존의 업계 단체의 로비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
 - 기업 및 단체로부터 정치자금 조달 규제를 강화하고 정치인과 보좌관 등의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국, 행정쇄신회의, 각료위원회 등 3대 조직을 신설
- 국가전략국은 10명 내외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각 분야 전문가 등 30명 규모로 구성하여 예산의 골격을 정하고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
 - 재무성은 국가전략국의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 행정쇄신위원회는 모든 예산과 제도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재정 운영을 감시
 - 예산 낭비를 없애는 것이 목표이며 불필요한 사업은 사업진행 중이라도 중단
 - 국회의원 외에 기업가 및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참여
 - 각료위원회에서는 각료회의에 앞서 관계부서 장관들이 사전협의 및 조율을 의무화하여 부처 폐쇄주의를 완화
 - 기존의 사무차관회의는 폐지
- 정치인과 관료의 행동반경에 대한 명확한 설정
- 각 부처의 각료와 부대신, 정무관 외에는 국회의원과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
 - 법안 작성이나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관료에게 구체적인 면담 또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각료에게 내용을 보고토록 함.
 - 관료가 정책 등과 관련 국회의원이나 다른 정치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불허
 - 의원이나 의원비서가 보조금이나 교부금,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해 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으로 작성해 보관한 뒤 정보를 공개
 - 정치인이 관료에게 접근해 청탁하거나, 관료가 정치인을 상대로 정책 로비를 벌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막자는 의도
 - 각 성·청에 부처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은 각료 등 정치가만 할 수 있으며 관료는 할 수 없다는 지침을 통보
 - 각료가 허가하지 않은 차관급 이하 관료의 기자회견은 불가능
 - 과거 관료들이 장관을 돌려놓고 언론과 소통하면서 부처 이기주의와 정책 혼선을 키웠고, 국정 정보 장악을 통해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한 폐단을 시정
- 정보 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강화
- 낙하산 인사, 수의계약, 관제담합, 핵무기 반입과 관련한 미·일 밀약 등 그동안 국민에게 숨겨 온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³⁾
- 예산 낭비의 일소
- 국가의 총예산 207조 엔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하여 세금의 낭비를 차단함.
- 현재의 정책·지출을 모두 재점검하고, 특별회계, 독립행정법인, 공익법인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며, 국가가 행하는 계약을 적정화함.
 - 국채 발행을 통한 SOC 사업 등은 가급적 지양하고 세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절감

3) 국회입법조사처(2009) p.19 참조

- 용도가 불분명한 특별회계 등은 폐지하여 불요 불급한 지출을 억제
 -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전략국에서 시의성이 낮은 사업을 연기 하고 수익계약을 재검토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
- 국가공무원 인건비 20% 삭감과 중의원 비례대표 정수의 80석을 삭감하여 세금 낭비를 줄이겠다고 공약
- 낙하산 인사의 근절
- 독립행정·공익 등 4,504개 법인에 2만5,245명의 국가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 이들에게 12조1,334억 엔(2007년도 분)의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관제담합이나 수익계약 등 세금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음.⁴⁾

□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권한 및 재원을 대폭 이양하고, 중앙정부의 조건부 보조금은 폐지하는 대신 용도에 제한이 없는 일괄 교부금을 확대
- 고이즈미 정권의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지방보조금만 삭감되고 권한과 재원의 이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해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 고속도로의 무료화, 우정사업의 근본적인 수정을 통하여 지역을 활력 있게 함. 가스미가세키(霞が関)를 해체·재편성하여 지역주권을 확립

3. 경제 및 복지정책

□ 내수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

- 민주당 정부는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 생산과 투자, 고용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
- 중학교 자녀수당 신설, 출산장려금 인상, 대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면제

- 등 자녀양육·교육 부문의 직접 지원을 확대
- 고속도로 통행 무료화,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농가소득보상제도 신설 등도 추진
- 쌀, 보리, 콩 등 주요 농산물을 정부 제시 목표량 이상으로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는 판매가와 생산비용 격차를 정부가 보상
- 국내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 추진
-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역점
- 기존에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주로 경제산업성, 재무성, 후생노동성의 3개 성·청 등으로 나누어진 중소기업 관련 행정업무를 일원화 추진
-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18%에서 11%로 인하하여 투자 및 수익기반 강화
- 홍수대책으로 1952년부터 추진해 온 안바담 건설을 보류하기로 결정
- 안바담 건설은 일본 관료정치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홍수방지와 수도권 급수원 확보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초대형 댐의 추가 건설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음.
- 토목공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낡은 방식의 경제모델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로 평가받고 있음.

□ 비정규직과 실직자 보호를 통한 고용문제 해결

- 경기침체에 따른 양극화와 고용불안을 자민당의 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비정규직 및 실직자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중시
- 비정규직 증가를 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사회문제로 대두했던 제조업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
 - 전문직 이외의 파견근로자는 상시고용으로 전환하며 기간제한을 초과한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직접고용 간주제도를 도입
 - 최저임금을 시급 700엔에서 1,000엔으로 인상하며 고용보험을 비정규직으로 확대 적용하고 실업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강화

4) 국회입법조사처(2009) p.19 참조

※ 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

- 자민당 정권은 내수 확대정책을 병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 및 수출을 중시 경제 정책을 시행

○ 2000년 이후 불황 탈출을 위해 자민당의 경제정책은 성장 중시 기조를 유지

- 고이즈미 총리(2001. 4~2006. 9)는 '개혁 없이 성장 없다'는 슬로건을 내세움.
- 아베 신조 총리(2006. 10~2007. 9)는 '성장 없이 미래는 없다'는 기치를 내세움.
- 아소 다로 총리(2008. 9~2009. 9)는 2020년까지의 성장전략을 담은 '미래개척 전략'을 발표
- 자민당의 세계개편안은 재정건전화에 위한 세수증대만 고려하고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배려는 적다는 비판에 직면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증세방안보다 저소득층에 부담이 큰 소비세 인상을 경제호전 시 추진하겠다고 공약
- 이번 총선에서 성장력 제고와 고용 확대에 의한 소득격차 해소를 공약
- * 2010년 후반에 연간 2% 성장 실현, 3년간 40~60엔의 수요 창출로 200만 명 고용 등

○ 자민당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미·일 무역마찰을 계기로 시장개방과 내수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일본의 수출비중(16%)은 G7 중 미국(13%)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나 2001년 이후 수출 및 무역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 * 일본의 실질 GDP 대비 수출비중 추이: 2001년(10.6%)→2005년(14.3%)→2008년(17.4%)
- * 일본의 실질 GDP 대비 무역의존도 추이: 2001년(20.5%)→2005년(27.3%)→2008년(34.7%)
- 일본이 여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금융부문의 손실이 적고 수출비중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더 많이 받은 것은 △2001년 이후 수출 비중의 지속적 상승 △미국·유럽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높은 고급제품 수출 비중

△경기침체로 생산이 격감한 3대 주력 업종(운송기계, 전기기계류, 일반기계)의 수출비중이 높은 점 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⁵⁾

○ 자민당은 성장 및 수출중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에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 *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중소기업 CP 매입한도 2조 엔 설정(2008. 12)
- * 신용보증협회의 중소기업 보증 확대(6조→20조 엔, 2008. 10)
- * 신용보증협회의 중소기업 보증 확대(20조→30조 엔, 2009. 4)
- *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휴업수당 지원율을 대기업의 경우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중소기업은 80%에서 90%로 각각 인상(2009. 4)
- * 중소기업 경감세율을 22%에서 18%로 2009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인하(2008. 12)

○ 자민당 정권은 1990년대 장기 불황시기에 다수의 부실기업을 파산시키거나 매각을 유도하는 데 소극적이었으며 상당수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기업들의 상호출자, 은행 부실채권 보존 등의 조치를 취해 옴.

-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자동차·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섰으나 상당수 기업들은 은행의 대출 연장과 기업 간 협력관계 유지 등을 연명하여 미국·유럽에 비해 구조조정이 미흡

○ 자민당 정권은 민주당의 직접지원 방식과 달리 간접 지원 방식을 취하였음.

-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책으로 공공투자 확대 등을 중시함.
- 민주당은 중학교 자녀수당 신설, 농가소득 보상 등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나 자민당은 지방자치단체, 업계단체, 조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주민, 근로자, 농민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왔음.

- 월 10만 엔의 수당을 지급하는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고용보험과 생활보험 사이에 제2의 사회안전망을 창설

□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조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나 급진적 온실가스 배출량 선

언이 업계의 반발을 초래

- 환경 관련 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
- 차세대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지구온난화 대책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강력하게 추진

5) 국제금융센터(2009a) pp.2-3 참조

- 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으로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을 제고
- 급진적 온실가스 배출량 선언의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
 - 민주당의 매니페스토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2005년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선언
 - 2009년 6월 10일 아소 총리는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목표(2020년)로서 2005년 대비 15% 감축(1990년 대비 8%)을 발표한 바 있음.
 - 산업계는 이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강함.
 - 민주당의 매니페스토에 비해 훨씬 낮은 아소 총리의 중기 감축목표에 대해서도 산업계에서는 2005년 대비 4% 감축을 요구한 바 있음.

□ 연금·의료·복지개혁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

- 연금통장을 발급하여 연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함.
 - 1997년 연금기록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5천여만 건의 납부 기록이 누락돼 주인을 알 수 없게 되어 국민의 분노를 산 사건에 대한 대책
- 2013년까지 연금제도 개혁을 마련
 - 국민연금(자영업자를 포함한 20세 이상의 국민), 후생연금(직장인), 공제연금(공무원과 교직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연금제도를 일원화하고, 저연금자에 대해 월 7만 엔의 최저보장 연금을 보장
-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는 폐지하고, 의사의 수를 1.5배로 늘림.
- ‘장애자 자립지원법’을 폐지하여 장애자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4. 대외정책

- 대미의존도를 낮추며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 동맹 관계의 모색을 시도

표 6. 민주당과 자민당의 경제정책 비교

분 야	민 주 당	자 민 당
성장전략	- 월 2만6천 엔의 '아동수당' 지급 - 고속도로 무료화 - 중소기업 100만 개 창업	- 2010년 이후 경제성장을 2% 달성 - 향후 3년간 40조~60조 엔의 수요 창출 - 200만 명의 고용창출, 향후 10년 이내에 가계소득을 연간 100만 엔 향상 - 1인당 국민소득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환경정책	-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환경기술의 개발·실용화 지원 - 온난화 대책과 신산업(태양광패널, 차세대자동차, 에코가전 등) 육성	- 태양광 발전 도입량을 2020년에 20배, 2030년에 40배로 끌어올림. - 에코카 구입 보조제도로 연간 100만 대의 수요 창출 - 에코 포인트 활용으로 그린가전의 보급 확대
고용정책	- 최저임금 인상(시급 1,000엔) - 직업훈련제도(월 10만 엔의 수당지급) 도입 - 고용보험의 비정규직 확대	- 고용조정조성금 등에 의한 '일본형 워크셰어링' 추진 - 향후 3년간 100만 명에 직업훈련 실시 - 고용재생 특별교부금(2,500억 엔) 교부 -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보조금 지원
(비정규직 관련)	- 제조업 파견 원칙금지 - 전문직 이외의 파견근로자는 상시고용으로 전환 - 기간제한을 초과한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직접고용 간주제도' 도입	- 일용고용 원칙 금지 - 비정규직의 취업·생활 지원과 정규직 전환 지원
중소기업 정책	-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18% → 11%)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 - 중소기업 금융검사 매뉴얼 적용 완화	- 중소기업에 대한 관공서 발주액 1조 엔 이상 증액 - 부당 할당 판매에 대한 가이dra인 개정
기타	- 농업의 호별보상제도 신설	- 도주제 도입
재정 건전화	-	- 2019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소비세	- 현행 세율 5%는 최소 향후 4년간 유지 - 세수 전액을 연금재원으로 활용	-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의 근본적 개혁 실시(2011년 목표) - 소비세는 경기호전 시 인상
기타 세제	- 조세특별조치의 근본적 재검토 - 잠정세율 폐지 -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 정리	- 에코주택·에코카 감세 등 세제 전체의 그린화 - 상속세 대책
정책 재원	- 16조8천억 엔(2013년 기준) 공공사업 삭감 - 특별회계잉여금 활용	-

자료: 일본 민주당 및 자민당 홈페이지

- 주체적인 외교 전략을 구축한 후에 미국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완수한다는 방침
 -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이라크 전쟁 실패와 금융위기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원인이 있다

고 언급하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외교방식을 비판(뉴욕타임즈, 8. 27)

- 인도양 다국적군 급유 활동 지원 재검토, 오키나와 미군비행장 외부 이전, 주일미군 지위협정 개정, 주일미군 분담금 재검토 등을 추진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촉진하고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며, 이때 식품의 안전·안정 공급, 식료 자급률의 향상, 국내 농업·농촌의 진흥 등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⁶⁾
- 기존의 대외정책의 기조인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안보정책에 일부 변화가 있겠으나 미국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기존 미·일 관계를 바꾸는 모험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 미·일 동맹 변화 모색은 자칫 국내외적인 반대와 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협력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받은 일본 경제의 침체 탈피를 위해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
 - 미국의 경기회복 후에도 일본의 대미 수출 규모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점이 아시아 국가와의 경험 강화 필요성을 높임.
 -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마찰을 줄이고 협력 강화
- 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재해대책, 전염병 대책 등의 분야에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내 협력 체제를 확립
 -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안보분야에서는 동북아시아 비핵화 구상, 경제 분야에서는 아시아 공용통화의 창설로 나타남.
 - 장기적으로 유로존 같은 동아시아 통화 창설을 목표로 하되 통화협의체에 달러를 제외하지는 않음.

- 아시아·태평양 국가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투자·노동, 지적재산 등을 포함한 경제연계협정(EPA),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 중국,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모든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신뢰관계의 구축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
 -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의 선결과제는 과거사 청산
 - 아시아 국가와의 화해 시도가 일본 내 민족주의자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경우 주변국의 반일감정을 오히려 자극할 위험성도 있음.
 - 떠오르는 강국인 중국과 협력과 동시에 견제도 해야 하는 양면성이 일본 외교의 어려운 해결 과제

□ 한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나 뚜렷한 변화는 없을 전망

-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6월 대표로서의 최초로 방문한 국가가 한국이었으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 가장 먼저 축전을 보낸 국가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었음.
 - 하토야마 총리는 일·한 의원 연맹 최고고문을 역임하였고 부인 미유키 여사 등 가족들이 한류스타 팬일 정도로 한국에 대해 우호적임.
 - 하토야마 정권은 한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공약에서 명문화하고 있어 경제·외교·안보를 중심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확대될 전망
- 일부 한·일 간의 쟁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인식 문제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될지는 불투명
 -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대신할 대체 추모시설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일본군 위안부 배상도 검토
 - 민주당은 선거공약집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자민당과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음.

6) 국회입법조사처(2009) p.24 참조

- 하토야마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대체 추모시설 설립을 건설한다고 밝혔으나 보수 우익세력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역사인식 문제의 개선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함.
- 재일교포 등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해 조기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논란이 많아 도입 가능성이 불투명
- 한·일 FTA 체결에는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전망
 -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수준이 가장 근접해 있고 대화가 통하는 상대인 한국과의 경협 강화에 중점을 둘 가능성
-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비핵화 원칙과 대북 강경책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함.
 - 하토야마 정권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전제임.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일본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임.
 - 납치문제는 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임과 동시에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국가의 책임으로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임.
 - 북·일 협상이 진전되고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면 6자회담에도 보다 유연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됨.

III. 경제적 영향 및 민주당 정권의 과제

1. 경제적 영향

□ 올해 미집행 추경예산 집행을 중단함에 따라 올해 일본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내년 이후 성장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결된 2009년도 추경예산 가운데 미집행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이를 2010년도 예산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방침을 표명
 - 추경예산의 총액 14조 엔 가운데 현 시점에서 10조 엔 이상이 집행정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
- 그러나 민주당이 강조하는 소비자 중시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소비 및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점차 국내 민간수요 회복으로 연결될 전망
 - 2002년 이후 일본의 경기회복이 수출주도에 의해 이루어졌고 최근의 경기회복 징후도 공공투자 중심의 경기부양책에 주로 기인하여, 향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국내 민간수요의 회복이 긴급
 - Barclays Capital은 정권 교체 시 가계소비 증대 등을 배경으로 2010년도의 경제성장률이 1.5% (현 정부 지속 시)에서 1.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보육수당은 가계의 연간 가처분소득을 1% 증대시켜 2010년도의 민간소비가 0.6%(현 정부 지속 시)에서 1.2%로 증가할 전망

□ 민주당 경제공약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 노무라증권은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자민당 정권의 대책과 비교해 올해는 1.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낮아지나 2010년에는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2011년에는 -0.8%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 부양대책을 삭

감할 방침이어서 올해 성장률 제고효과는 하락하나 앞으로 대국민 직접 지원책에 따라 개인 소비 및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표 7. 민주당 집권 시 성장률 제고 효과

(단위: %포인트)

구분	기존 경제대책				민주당 집권			
	2009	2010	2011	계	2009	2010	2011	계
실질 GDP	1.5	0.5	-0.8	1.2	1.2	0.7	0.1	2.0
개인소비	0.6	1.2	0.0	1.8	0.5	1.6	0.6	2.7
설비투자	1.2	2.1	-0.4	2.8	1.5	4.0	0.7	6.2
주택투자	0.4	0.8	0.7	1.9	0.4	1.0	1.3	2.7
공공투자	18.5	-11.2	-7.0	0.3	11.3	-12.3	-4.5	-5.5
수입	1.8	1.5	-0.2	3.1	1.3	1.7	0.9	3.9

자료: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

- 미즈호종합연구소는 재원 확보가 전액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매니페스토의 명목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2010년 0.7%에서 집권 말기인 2013년 -0.1%로 하락한다고 추정
- 대국민 직접 지원에 의해 민간수요는 매년 증가하나 공공수요 감소가 이를 상쇄하는 것이 주요 원인

표 8. 민주당 매니페스토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구분	Base Line* (조 엔)	매니페스토 효과 (조 엔)	명목 GDP** 증가율 (%)	실질 GDP** 증가율 (%)
GDP	2010	478.9	3.2	0.7
	2011	478.9	0.7	0.1
	2012	478.9	-0.1	0
	2013	478.9	-0.4	-0.1
민간수요	2010	355.2	4	1.1
	2011	355.2	5.2	1.5
	2012	355.2	5.3	1.5
	2013	355.2	5.4	1.5
공공수요	2010	117.8	-0.7	-0.6
	2011	117.8	-4.6	-3.9
	2012	117.8	-5.5	-4.6
	2013	117.8	-5.9	-5

주: 1) *는 미즈호종합연구소가 2009년 8월 19일 발표한 명목 GDP 전망치

2) **는 Base Line 대비

자료: 미즈호종합연구소, 『미즈호 일본 경제 인사이트』, 2009. 8. 31. 대외경제연구소(2009) 재인용

□ 정권 교체가 주가의 제한적 상승, 달러약세·엔화강세, 채권수익률의 제한적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외환시장은 일본 외환당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달러약세·엔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자민당 정권에서는 엔화가 90엔대 밑으로 내려가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반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
 -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이 G20 정상회의에서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엔화 절상을 용인
 - 수출의존도를 줄여 내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
 - 엔화의 추가 강세 압력 시 예전과 같은 강한 지지 압력은 감지되지 못할 수준에 그칠 것임.
 - 엔/달러 환율은 올 3월 이후 95~100엔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8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 9월 25일에 90엔이 붕괴되는 엔화강세 기조를 보임.
 - 경제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일본 정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할 경우 금리가 올라 저금리의 엔화자금이 고금리 국가로 빠져나가는 엔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완화되고 해외로 나갔던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화강세 요인이 될 수 있음.
 - 민주당은 현재 달러화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달러약세 및 여타 주요 통화의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과의 대등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여 자민당 정부에 비해 미국을 배려한 달러(미국채) 매입 태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달러약세·엔화강세 요인으로 작용
 - 다만, 자동차·전자업체들이 민주당의 정치적 지지기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엔화강세 용인 정도는 제한적일 수 있음.
 - 민주당의 각종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한 점과 대미 관계의 변화 가능성 등이 외국인 투자유입을 저해할 경우 엔화약세 견인

표 9. 정권 교체에 따른 외환당국의 입장 비교

분 야	민 주 당	자 민 당
재무부	최근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나카가와 재무장관, 시노하라 재무차관)	엔화강세는 수입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내수진작에 이로우므로 환율이 급변동하지 않는 한 현 추세를 수용할 것(후지이 재무장관)
일본은행	엔화강세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일본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소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교역조건 및 해외 M&A 때 이점을 안겨다 줄 것(시라카와 총재)	단기적으로 엔화강세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경기를 지지하는 효과를 가질 것. 중앙은행 총재로서 환율 개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그 권한이 재무장관에게 있으므로) 부적절함(시라카와 총재).

자료: 국제금융센터

- 채권시장의 경우 민주당이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방침의 현실성이 낮아 채권수익률 상승압력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
 -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작년 상반기의 1.8% 수준에서 연말에는 1.2%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국채 증발 우려 및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

□ 긍정적 영향

- 정치·경제·사회 개혁을 통한 일본 경제의 회생 기반 마련
 - 정책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국정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우 침체된 일본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
 - 서민·중소기업 중시 및 내수기반 확대 등을 통해 자민당 정권의 성장 및 수출 위주 경제시스템을 수술할 경우 일본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발판이 될 수 있음.
 -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여론의 지지를 배경으로 일본 경제의 난제인 재정 악화, 저출산·고령화, 고실업률 등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
 - 일본 경제의 내수활성화는 수입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와 역내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
 - 농림·수산업, 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지원

-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관광 및 유통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기반 확대에 기여
 - 서민보호 및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으로 의료용품, 교육기자재, 실비용품, 육아용품시장 등이 확대될 전망
 - 친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 확대로 환경 관련 기술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첨단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정책에 따라 바이오, 나노테크 등의 첨단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
- 세계 교역 확대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촉진
-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포함 세계 각국과 경제연계협정(EPA),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의 영향으로 일본과 세계의 교역량 확대
 - 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재해 대책, 전염병 대책 등의 분야에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내 협력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정권 교체는 일본 기업의 제3차 중국 러시아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기지 이전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⁷⁾
 - 샤오민제(肖敏捷) 다이와중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중시(重視)를 표방한 민주당의 집권으로 일본 기업들이 중·일 경제 관계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프라이드를 버리는 경향이 더 빨라질 것이라며 중국은 이제 일본 기업에 메인 마켓이라고 전망
 - 일본 기업의 1차 중국 러시(1992년), 2차 중국 러시(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0년)에 이어 이번 3차 러시는 액정패널, 화학원재료, 부품소재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이 이전되어 재패니즈 퀄리티(quality)와 차이나이즈 코스트(cost)의 결합이라는 최강의 조합을 노릴 것으로 예상
 - 한·중·일 관계 개선 및 경험 강화는 지역경제 안정과 경제성장에 기여

-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은 한·중·일 3국 간 경제적 마찰보다 미래 지향적 상생 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
- 과거사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경우 3국 간 정서적 갈등 완화
-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의 수입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동아시아 역내 교역활성화는 지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시아 경제의 실질적 통합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음.
- 한·중·일 간의 정치·경제적 경쟁심리가 강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경제권의 견제가 예상됨.
- 엔화와 위안화의 경쟁관계로 인해 지역경제를 하나로 묶을 공동통화 창설 작업이 쉽지 않음.

□ 부정적 영향

- 포퓰리즘 정책이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에 미칠 악영향
- 성장중시정책보다 재분배정책에 치중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
- 일본의 경우 소득격차 확대보다 성장률 하락이 더 큰 문제⁸⁾
- 주요 소득분배지표를 볼 때 소득격차 확대는 심각하지 않으며 모든 소득계층의 평균 소득이 하락
- * 지니계수는 2004년에 소폭 상승한 후 2007년까지 거의 정체상태이며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은 2006년에 소폭 상승한 후 2007년까지 거의 정체상태
- *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계층부터 최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계층까지 모두 2005년 이후 평균 소득이 하락세
- 이는 일본에서 소득불평등보다 모든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아동수당, 고속도로 무료화, 농가소득보장 등에 의한 재분배정책을 확대할 경우 경제의 효율이 약화되어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 있음.

7) 조선일보 2009. 9. 2 기사 인용

8) 原田泰, 2009, pp.9-10.

- 선심성 공약의 실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재정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국가의존형 복지병을 조장할 위험성
- 다만 경쟁에서 도태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효율적이고 한도가 있는 재분배정책은 구조개혁과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음.
- 제조업 파견근로제 폐지,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시행될 경우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가능성
- 제조업 파견노동자제도의 원칙적 금지로 향후 일본 기업들의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음.
- 다만, 민주당이 지지기반인 최대 노조단체인 렌고(連合)가 정규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점을 의식해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삼는 데는 소극적일 수도 있음.

- 내수중시정책은 엔화강세의 장기화를 초래, 일본 수출기업의 실적 회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 구조조정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일본 경제에 타격 우려

- 미·일 관계의 약화 가능성

- 대미 관계 재구축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경우 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개혁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 관료중시 정치시스템과 성장중시 경제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야당인 자민당과 그 지지세력과의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의 절반가량이 초선이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자민당의 다선의원들과 관료사회에 휘둘릴 가능성

2. 민주당 정권의 과제

□ 국정 전반의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리더십 확립

- 침체된 일본 경제를 안정적 성장궤도로 올려놓는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 총리와 같은 강력한 리더

십 확보가 중요

- 민주당은 대처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이 국회의원이 행정력을 직접 행사하는 영국식 내각제 운영방식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실행 중임.
- 민주당 내부 및 연립정파 간 갈등 해소
 - 당내 입지가 확고하지 않은 하토야마 총리와 당내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 사장 간의 원만한 투톱체제 운영이 중요
 - 대미 관계, 우정성 민영화 보류 등을 둘러싼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국민신당과의 원만한 관계 조율이 필요
-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대중국 경제협력 강화 정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미·일 관계를 강화할 필요 있어 양국 현안을 재검토하는 데 외교적 수완이 필요

□ 내수활성화 및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 민주당이 제시한 재원 확보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 후지이 재무상은 기존 부양책 삭감과 재배치 계획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는 입장
- 기존 부양책 중 5조 엔 가량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며 갈수록 재원부족 가능성이 높음.
- 민주당 집권 말년인 2013년 1년간 대국민 직접지출에 총 16조8천억 엔의 재원이 소요될 예정
- 아동수당 지급 5조5천억 엔,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5천억 엔, 간병 종사자의 임금인상 8천억 엔과 이외에 자동차 관련 잠정세를 폐지에 따른 감세액 2조5천억 엔과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에 따른 1조3천 엔의 재정보전액의 합계
- 민주당은 2013년의 직접지출액 실행에 필요한 16조8천억 엔을 예산 낭비 억제(9조1천억 엔), 정부자산 매각·활용(5조 엔), 조세특별조치 폐지(2조7천억 엔) 등으로 확보한다는 계획
- 그러나 공공사업 축소나 자산매각, 조세특별조치 폐지 등은 정부 재량권으로 실행 가능하나

인건비·보조금 삭감, 입찰개혁, 특별회계의 잉여금 활용 등은 조직·사업의 성격상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미즈호종합연구소는 매니페스토에 제시된 16조 8천억 엔의 재원 확보안에 대해 최소한 5조1천억 엔 정도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 민주당의 매니페스토는 재원확보 방안으로 국채 발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재원부족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선심성 공약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국채 추가발행에 따른 재정부담 및 예산운용의 제약이 불가피함.

표 10. 민주당 직접지원책 및 재원 확보방안 내역(2013년 1년간)
(단위: 조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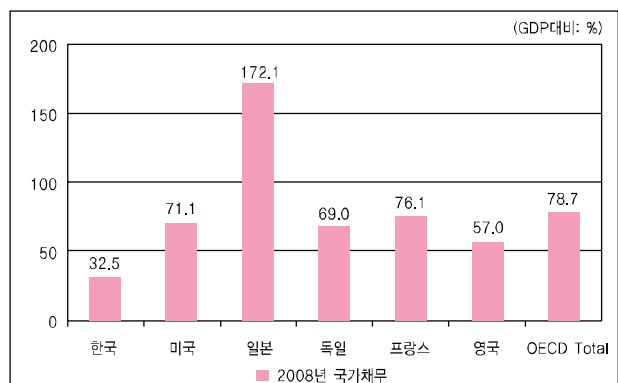
재원 확보액	재원 확보방안
1.3	불필요한 공공사업 지출 삭감
1.1	국가공무원 인건비 20% 감축
6.1	낙하산 인사가 재직하는 산하기관 지출 재검토 및 각종 보조금 삭감
4.3	각종 기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외환자금특별회계의 운용의 등
0.7	미사용 국유지, 관사, 주식 등 정부자산 매각
2.7	소득공제 폐지 및 불투명한 조세특별조치법 재검토
총 16.8	
소요액	대국민 직접지원책
5.5	아동수당·출산일시금 지원 등
0.9	공·사립 고교의 수업료 지원, 대학 장학금 확충 등
1.6	의사 부족 해소 등 의료복지 강화
1.0	농업의 호별 소득 보상
2.5	가솔린세 등 잠정 세율의 폐지
1.3	고속도로 사용료 무료화
0.8	고용 대책
3.2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폐지, 최저 임금 인상, 중소기업 지원 등

자료: 민주당 매니페스토 및 미즈호종합연구소, 2009. 8. 31.

- 막대한 대국민 직접지원에 대한 재원확보책이 미흡한데다 재정건전화 문제를 언급치 않고 있어 공약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일본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은 낮고 소비세율은 높은 EU형 세수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주당은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만 공약

- 2008년 기준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40.69%로 EU의 27.97%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반면, 소비세율은 5%로 독일 19.6%, 프랑스 19%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음.
- 연금제도 개혁법안을 마련하는 2013년까지, 즉 향후 4년간 소비세율을 현행 5%로 유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현행 18%에서 11%로 인하한다는 계획
- 세출 측면에서는 예산 낭비 억제, 정부자산 매각, 조세특별조치 폐지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삭감한다는 계획
- 소비세를 인상치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계획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원부족이 예상되는 대국민 지원책의 실행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재원을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방침이 예정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
- 사카기바라 에이스케 와세다대 교수(전 대장성 재무관)는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며, 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 확보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일본의 국가채무는 1990년대 이후 경기불황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급증, 일반회계에서 국채의 비중이 20%를 웃도는 등 예산운용상의 경직화로 재정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음.
-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1995년 86.7%→2000년 135.4%→2004년 165.5%→2008년 173.0%

그림 2. 국가채무의 국제 비교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85-June, 2009.

□ 작은 정부 실현과 생산성이 낮은 부문의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청사진 제시 및 과감한 실행

- 과도한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 실현과 재정지출 축소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
 - 정치인 주도의 정책 결정, 예산 낭비 일소, 지방분권화 등 정치·행정시스템의 효율화 외에 정부 및 공공부문 조직을 축소
 - 고이즈미 개혁 때 관료들의 저항을 극복치 못해 오히려 늘어난 정부예산 및 공무원 수 감축
 - 민간으로 넘겨서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부문의 민영화 추진
 - 정관 유착과 정부 조직 및 공무원 수 확대의 근거가 되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
-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이후 저성장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거품을 배태시킨 금융정책의 실패와 구조개혁의 지연 때문임.⁹⁾
 - 1990년을 전후로 과도한 금융완화로 물가상승 및 자산거품이 발행하자 급격한 금융긴축에 돌입,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줌.
 - 1990년대 엔화강세로 달러기준 노동비용이 급상승,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영부담을 가중시켜 구조조정을 압박
 - 기업의 구조조정은 고용을 줄여 내수를 위축시킴.
 - 건설·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이 제조업 중심의 수출산업보다 효율성이 열악한 이중구조가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일본의 산업별 노동생산성 비교(1990~2005년 연평균 증가율): 제조업 3.1%, 서비스업 0.3%
 - 경쟁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가 일본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외부충격에 취약하게 함.
 - 수출·내수부문 간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산업구조 합리화와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함.
 - 내수기반의 성장의 관건이 되는 기업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혁파

□ 일본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전략 제시

- 일본 경제가 정체된 또 다른 이유는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
 - 일본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부품·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대만 등의 약진으로 전자·정밀기기 분야의 경쟁력 저하가 현저함.
- 민주당 정권의 정책은 일본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제시가 부족
 - IT, 바이오, 나노테크 등 첨단기술의 개발·보급 지원과 환경, 농림·수산업, 의료·간병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성장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민당의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음.
 - 중소기업 100만 개의 창업지원과 온실가스 배출 기준 대폭 강화에 따른 친환경산업 육성 등이 자민당 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임.
- 대국민 직접지원책에 의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성장전략 제시가 필요
 - 전자·정밀기기 부문의 구조조정과 환경·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필요
- 연금제도 개혁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내수진작책을 마련할 필요
 - 대국민 직접지원책에 의한 단기적 내수활성화 방안이 그치지 말고 연금제도 개혁을 통한 노후 생활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연금제도 개혁방안이 필요
 - 민주당의 연금제도 개혁방안이 최저보장연금 도입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 등 불공평성 문제를 해소할 대안 제시하여 연금에 대한 신뢰회복이 중요
 - 최저보장연금의 재원은 소비세를 인상치 않고서는 확보하기가 어려움.

9) 原田泰, 2009, pp.2-3.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민주당의 정치·행정시스템 개혁은 개혁의 목표설정 및 지속적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시사

- 고이즈미 정권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금융산업 재건 및 공공부문 개혁, 민간주도형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치 및 행정시스템의 개혁에는 실패
 - 일본 경제의 취약점인 수출·내수산업의 이중구조는 내수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주요 요인인 바 관료주도의 행정시스템을 방치하고는 규제개혁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
 - 고이즈미 정권에서 금융·노동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으나 미국·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본은 여전히 규제가 과다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위
 - 이는 규제개혁이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 주도로 관료와 업계의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
 -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감축을 위한 예산 및 공무원 수 감축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재정건전성 강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총리의 결단하에 강력히 추진해야 함을 시사
- 고이즈미 총리 퇴임 이후 아베, 후쿠다, 아소 등 후임 총리들의 개혁 의지 약화와 리더십 하락 등으로 구조개혁 작업이 지체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본 경제가 선진국 중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됨.
 - 고이즈미 총리가 시작한 공무원 개혁, 내수활성화, 공기업 민영화 등이 생산성이 낮은 내수 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수출 주력 업종 구조조정 등의 개혁으로 속도가 붙었다면 위기의 충격은 적었을 수도 있었음.

□ 구조개혁으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과 신성장동력 확충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줌.

- 양극화 심화에 대한 자민당의 안이한 인식과 대책 마련 소홀이 정권 상실 원인 중 하나로 작용
 - 고이즈미 정권 이후 심화된 소득격차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 통계지표상으로는 심각하지 않으나 청년실업,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격차는 커짐.
 - 일본의 소득격차 확대는 1990년대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확대되어 왔으며 고이즈미 정권의 노동 규제완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며 저소득층이 고착화된 데 일부 기인
 - 일본 언론은 소득격차 확대와 더불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기술의 격차, 정보의 격차까지 제기하며 일본을 ‘격차사회’로 표현
 - 자민당 정권은 개혁을 가속화하여 경제가 성장하면 격차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므로 개혁이 격차완화의 좋은 대책이라고 주장했으나 정확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에 소홀
 - 이는 구조개혁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 심화에 미리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 우리나라의 2009년 추경편성에 의한 서민생활안정대책 및 최근의 친서민정책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소득재분배정책이 일본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경계가 만만치 않음을 주목해야 함.
 - 일본 경제의 성장률이 저조하여 모든 소득계층의 평균 소득이 감소하고 나눌 파이가 줄어드는 가운데 소득재분배정책을 강화할 경우 자칫 경제의 효율이 떨어져 성장률이 더 하락할 위험성을 경계
 - 경쟁에서 도태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구제 차원의 효율적이고 한도가 있는 재분배정책을 시행하여 구조개혁 추진을 쉽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은 우리나라의 친서민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견해임.

- 재분배정책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 시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우리 경제의 경우 사회안정망을 강화하면서 경제의 효율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신성장동력 확충도 병행해야 함을 시사

□ 민주당의 내수활성화 정책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 등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 경제에 반면교사가 됨.

- 일본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으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은 수출비중이 두 배 이상 높은 우리나라의 내수기반 확대의 중요성을 새삼 보여줌.
 - 일본처럼 우리도 내수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수출·내수 부문 간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산업구조 합리화를 추진할 필요
 -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 정권이 미뤄 온 부실기업 정리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공약에서 언급이 없음.
 - 관료주도체제 개혁이라는 공약이 구조조정과 연결될 수 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득권 집단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소수 기업만 정리될 것으로 예상
- 일본 민주당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려는 것은 역내 무역자유화 및 경제협력 강화로 내수시장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입장
 -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유럽 수출시장의 위축과 달러화 위상 약화에 따른 동아시아 주변국의 경제협력 필요성 및 동아시아 공동통화 창설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 한·중·일 정상들이 10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3국 간 FTA 체결을 위한 산·학·관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
 - 3국 간 FTA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

한 디딤돌

- 지난 2000년 초에도 3개국 국책연구기관들이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섰지만 각국의 산업 및 교역구조가 달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함.
- 한·중·일이 각각 양자 FTA를 체결하는 접근방법보다는 3개국이 큰 틀을 짜서 대타협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로서는 3국 간 FTA 체결 협상과정에서 한·EU FTA 가서명 및 한·미 FTA 협상 타결 등을 토대로 FTA 허브국가로의 위상을 최대한 활용, 입지를 강화

□ 민주당의 정책이 일본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 수출업종의 위축을 상쇄할 만한 내수시장 창출이 쉽지 않음.
 -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하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 의존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
 -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실행할 정치적 리더십 확보가 관건
 - 재분배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나 소비세 인상 및 국채 발행 등의 정치적 결단과 대국민 설득이 필요
- 연금 부실,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에 장시간 소요
 - 연금개혁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필요한 소비세 인상 등 정치적 난제를 해결해야 함.
 - 소비세 인상 등의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국채 발행에 의존하거나 연금납부의 불공평성 해소 등에 실패할 경우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
- 그러나 정치·경제적 위기를 정권 교체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는 개혁에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 일본 경제 침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정권 유착, 낙하산 인사, 방만한 예산운용 등으로 인한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일대 개혁을 추진
- 한국·영국·미국·스웨덴 등 과거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정권 교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건강성을 상당부분 회복한 사례가 있음.
- 정치 부패와 정권 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며 침체된 일본 정치 및 경제시스템의 역동성을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민주당의 ‘탈관료 내각’ 방침은 국회의원이 행정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영국식 내각제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 총리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확립함으로써 일본 경제 회생을 위한 구조개혁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됨.

□ 민주당의 개혁은 우리나라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동시에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

- 기회요인은 한·일 관계 개선, 적극적 무역투자 개방정책,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내수활성화 정책, 엔화강세 장기화, 첨단 및 친환경산업 육성, 한반도 정세 안정 등임.
- 민주당의 내수진작책과 엔화강세 지속 등은 대일 수출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
- 민주당 집권에 따른 대일 수출 기대효과를 올해 3억7,000만 달러에서 내년 8억5,000만 달러, 2011년 11억2,000만 달러로 추정(삼성경제연구소, 2009)
- 다만 대일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이 적어 소비재 수출 증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 한국의 대일 수출은 2009년 1~7월간 116억2천만 달러이며, 원자재(49억6천만 달러, 42.7%), 자본재(45억9천만 달러, 39.5%) 중심
- 첨단 및 친환경산업 육성정책으로 양국 기업 간 IT·BT·NT·환경·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제조업 파견노동자제도의 원칙적 금지로 향후 일본 제조업체들의 제조 거점 해외이전이 확대될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 진출 유인이 증대
- 다만, 한국보다는 중국·동남아 등으로 이전 가능성이 큼.

* KOTRA 조사(2009. 8): Zojirush 및 Asahi Glass 등 주요 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교역·투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위협요인은 동아시아 외교 주도권 경쟁,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 가속화, 첨단 및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임.

- 중국의 저비용과 일본의 고기술이 결합할 경우 한국과 대만의 경쟁력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

□ 민주당 정권의 개혁추진에 따른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위협요인을 관리하여 경제회복 및 선진경제 진입에 기여하도록 유도

- 하토야마 총리의 근린우호적 외교정책에 호응, 한·일 관계 개선의 호기로 활용
- 독도 영유권 및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 가능성은 남아 있어 과도한 기대는 금물
- 민주당 집권에 따라 대일 인적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의원 외교를 강화
- 한·일 FTA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협상전략을 준비
- 한·일 양국은 2003년 10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지만 한국은 제조업의 고질적인 대일 무역적자 확대 우려로, 일본은 농업 분야의 반대로 인해 이듬해 협상이 중단
- 민주당이 한·일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농업 및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선거공약과 상충되는 점이 있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협상 재개 혹은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민주당 정권이 농촌 지지기반이 약해 향후 그 동안 협상의 주요 걸림돌이 농업문제에서 전향

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협상방안을 연구할 필요

- 일본 기업의 제3차 중국 러시에 따른 신중·일 밀월시대에 대비하여 한·일 FTA 체결 추진뿐 아니라 중·일 양국 기업과의 제휴 강화를 추진
 - 일본 기업과 기술 제휴를 하고 중국 기업과 마케팅 제휴를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배워야 함.

- 민주당의 내수진작책과 엔화강세 지속 등을 대 일 무역역조 개선의 호기로 활용

- 한·일 첨단 및 녹색산업 협력 강화
 - 양국 기업 간 IT·BT·NT·환경·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
- 엔화강세, 일본에 근접한 기술력을 활용,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를 유치

| 참고문헌 |

- 고용수·김진홍, 『일본 경제 회복의 배경과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국, 2006. 10.
- 국제금융센터(2009a), 「일본 경제가 유독 부진한 이유」, Issue Analysis, 2009. 4. 23.
- _____ (2009b), 「일본 정권 교체시의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 전망」, Issue Analysis, 2009. 8. 12.
- 배정호, 「일 민주당 집권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CFE View Point No.138, 2009. 9. 14.
- 삼성경제연구소, 『정권 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2009. 8. 31.
- 성병욱·김예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 정책 운용과 향후 과제』,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2009. 8. 11.
- 한국은행(2005), 「일본의 내각개편과 개혁추진 전망」,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제2005-98호, 2005. 11. 10.
- _____ (2009a), 「일본 경제위기 대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제2009-16호, 2009. 4. 12.
- _____ (2009b), 「일본의 총선 결과에 따른 영향」,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제2009-56호, 2009. 9. 1.
- 현대경제연구원, 『일본 정권 교체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09. 8. 28.
- Economist, “Stuck in neutral,” Finance & Economics, <http://www.economist.com>, 2009. 8. 13.
- Masahiro K. and S. Takagi, “Why was Japan Hit So Har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DBI Working Paper 153,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09. 10.
- 경제동우회, 『新政權に望む-新しい國づくりに向けた責任ある政權運營を求める』, 2009. 8. 31.
- 第一生命經濟研究所, 「政權交代後の民主黨政策の要点-したたかに現實路線に舵を切れるのか」, 經濟關連レポート, 2009. 8. 31.
- 三菱東京UFJ銀行, 「日本の民主黨政權を米國はどう見るか?-米國の對日轉門家の見方」, ワシントン情報, 2009 No.031, 2009. 8. 28.
- PHP總合研究所, 『新政權に望むこと:確固たる地域主義ビジョンを提示せよ』, 2009. 9.
- 中國電力(株)エネルギー總合研究所, 「日本經濟の行方と活路-金融危機後の變化を見通す」, エネルギー地域經濟レポート No.422, 2009. 9.
- みずほ總合研究所, 「マニフェストにみる自民黨と民主黨の主要政策~必要なのはマニフェストの体系としての評価」, 緊急りポート, 2009. 8. 19.
- _____ , 「マニフェストにみる自民黨と民主黨の主要政策」, 緊急りポート, 2009. 8. 19.
- _____ , 「民主黨政權の政策と經濟へのインパクト-所得分配・成長率への影響と財源確保の實現可能性を探る」, みずほ日本經濟インサイト, 2009. 8. 31.
- 原田泰, 「中國經濟-日本經濟の失敗からの教訓」, Focus Point, 大和總研, 2009. 10. 5.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09년 11월 16일 | 발행인 김영웅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 전화 3771-0001 | 팩스 785-0270~3

